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22.(금) 조간 / 2024. 11. 21.(목) 12:00 배포 2024. 11. 21.(목)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 -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제7조제3항제15호(국가계획 중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여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하여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10.29.), 사건기자 세미나(11.7.)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 “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journalist.or.kr/)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nmh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위원 명단
3.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과정

담당 부서 <총괄>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임성민 (044-202-3859)
<사업>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책임자	사무국장	나희경 (02-2204-1446)
		담당자	사무국원	이다경 (02-2204-14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1.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나.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2.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나.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3.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가.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나.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4.11.22.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붙임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 위원 명단**

no.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1	한국기자협회 추천	KBS 기자 /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지형철
2		한국일보 기자	김표향
3		뉴시스 기자	구무서
4		동아일보 기자	이진한
5		국민일보 기자	김유나
6	중앙지원단 추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	백종우
7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이해우
8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미경
9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변호사	양재규
10		마인드포스트 대표	이관형

붙임 3 **보도권고기준 제정 과정**

<TF회의사진1>

<TF회의사진2>

<10/29 업무협약 사진>

<10/29 공동세미나 단체사진>

<11/7 사건기자세미나 발제사진>

<11/7 사건기자세미나 단체사진>